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67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2
※ 참고자료	8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8
2. 광역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10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3일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III. 검토의견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사용자, 근로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u>한다</u> .	④ ----- ----- 하며, 각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u>
<신설>	4. <u>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u>
<신설>	5. <u>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⑤ ~ ⑨ (생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아동</u>, 청 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 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생략)	6. <u>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u> 7. <u>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청년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u> 8. <u>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으 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u> 9. <u>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제15조제4 항을 준용하여 아동-----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현행	개정안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행법¹⁾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舊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아동, 청년, 여성, 장애

1) 현재는 동 규정이 개정(2025.11.11.)되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2.10.~2025.2.)의 경우 농업계,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없고, 시민사회와 여성의 비중이 종전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5.~2022.1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참고자료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비교]

구분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5.~2022.10.)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10.~2025.2.)
여성	28명	7명
농업계	1명	-
청년	6명	1명
시민사회	10명	2명
노동	1명	-
산업	12명	3명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노동계, 농업계, 청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참고자료2).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단체(노동조합, 중소기업, 농업 등 생산자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법률에 명시된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의 위촉권이 제한되고, 배제 단체와의 역차별 문제, 추천단체 수 증가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²⁾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³⁾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2.10.~2025.2.) 위원구성 당시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5.~2022.10.)와 비교하여 청년, 노동,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위원 위촉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기능과 이행점검,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2026년 1월

2) 개정안 제15조제5항 각 호와 개정안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이 6,835개(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 비영리민간단체가 15,115개(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23년 3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천단체가 과도하게 많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3) 부산시도 이와 유사하게 각호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일정 수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기에는 지방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일부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5.~2022.10.) : 위원장(1) + 위촉직(77)

※ '21.5 출범시 기준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28명, 36%) · 남성(50명, 64%)	·
연령분포	· 10대(1명), 20대(2명), 30대(4명), 40대(13명), 50대(36명), 60대(21명), 70대(1명)	· 청년(19~34세) : 6명 · 평균연령 : 54세
직능별	· 전문가(48명) * 학계 22명, 공공기관 21명, 국제기구 3, 로펌 1명, 언론인 1명 · 각계 대표(30명) * 산업계 6명, 중소기업 7, 시민사회 10명, 종교계 4명, 지자체 1명, 노동계 2명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1기)(2022.10.~2025.2.) : 위원장(1) + 위촉직(32)

※ '22.10 출범시 기준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7명, 21%) · 남성(26명, 79%)	
연령분포	· 30대(2명), 40대(7명), 50대(18명), 60대(6명)	· 청년 1명(김승완 교수)
직능별	· 전문가(27명) * 학계 18명, 연구계 7명, 로펌 1명, 국제기구 1명 · 각계 대표(6명) * 중소기업(2), 시민사회(2), 지자체(1), 산업계(1)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2025.2~2027.1.) : 위원장(1) + 위촉직(35)

※ '25.2 기준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14명, 38.9%) · 남성(22명, 61.1%)	
연령분포	· 20대(1명), 30대(4명), 40대(6명), 50대(18명), 60대(7명)	· 청년 3명
직능별	· 전문가(25명) * 학계 13명, 연구계 8명, 법조계 1명, 공공기관 3명 · 각계 대표(11명) * 산업계 5명, 시민사회 3명, 노동계 2명, 농어민 1명	

2. 광역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광역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총인원	구성		민간현황							
		정부	민간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농업계	청년	산업계	시의원, 공공기관 등	기타
서울	40	10	30	13	2			5	2	공공(4)	법조인(2), 컨설팅(1), 학회(1)
부산	50	6	44	13	4			1	11	공공(13), 의원(2)	
대구	15	6	9	5				2	1	공공(1)	
인천	30	8	22	3	2				4	공공(9), 의원(1)	탄중센터(1), 의료계(1), 언론(1)
광주	50	7	43	10	2	2			12	공공(11), 의원(4)	금융(1), 의료계(1)
대전	20	6	14	6	1				1	공공(5), 의원(1)	
울산	27	3	24	1	3		1	4	4	공공(9), 의원(1)	산림조합(1)
세종	20	6	14	3	1			1		공공(7), 의원(2)	
경기	40	15	25	6	6				3	공공(5), 의원(2)	법조인(1), 언론(1), 금융(1)
강원	30	6	24	9	3		1		2	공공(8), 의원(1)	
충북	30	6	24	9	4		1		3	공공(4), 의원(1)	법조인(1), 언론(1)
충남	50	9	41	8	3			5	4	공공(16), 의원(3)	법조인(1), 금융(1)
전북	29	9	20	6	2		1		3	공공(4), 의원(3)	법조(1)
전남	40	15	25	7	3	1		4	2	공공(8)	
경북	24	7	17	4	3				5	공공(2), 의원(2)	산림기술인(1)
경남	30	8	22	4	4		2	1	1	공공(8), 의원(1)	탄중센터(1)
제주	66	22	44	15	5		3	2	10	공공(8)	예술(1)